



2025년 상반기, 강남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예상대로 상당수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강제 매각보다는 ‘압류 예고’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절차였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던 A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유동성이 막혀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 그는 수년 전 투자한 가상자산이 크게 올라 상당한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씨에게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며 안내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가상자산은 압류 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체납액을 납부하실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해 드립니다.”

A씨의 반응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당시 코인 시장은 상승세였기에, 지금 강제 매각당하는 것보다 세금을 내고 자산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 구청을 방문해 1억 2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솔직히 코인까지 확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미뤄둔 숙제를 끝낸 기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반기에만 1억 4천만 원의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행정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산 형태에 맞춰 ‘적법한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한 결과였습니다.